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타인에 대한 실수는 말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말실수는 대체로 비유가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다. 비유는 설명하려는 것을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는 기법이다. 비유의 사용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 또한, 대화의 즐거움을 높이는 언어유희다. 그럼에도 누구나 특별한 공부 없이 하지 않아도 빗대서 표현하고 설명할 줄 알며 비유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성격이 불같다고 하거나 마음이 바다고 한다고 말하는 데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듣는다.

구구한 설명 없이도 더 확실하게 의미하는 바를 표현 하면서 우리 사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비유를 들어 보자면 흡수제나 금수제 등이 있다. 한국인이려면 이 절묘한 비유에 단번에 공감하며, 자신은 어떤 수자인 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보면 많은 단어를 낭비하지 않아도 좋으니 비유는 언어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대표적인 비유 방법은 직유와 은유이다. 직유는 '마치 노예처럼' 또는 '황제 같은 태도' 등의 표현이고 '마음의 정원'이나 '인생의 황혼'과 같은 방

좋은 비유와 죽은 비유에 대하여

법은 은유다. 그렇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에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빗대어 연결한다 해서 좋은 비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유의 수사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부터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수사학'에서 비유하는 능력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언어 체계와 인간의 언어 사용 능력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곧 비유법이다. 비유를 통해서 더 쉽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설득되기도 쉽다는 것이다. 말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좋은 비유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요즘에는 명색이 비유인데 그 저급함이 너무나 심해서 말귀를 의심할 정도다. 비유의 생명력은 빗대기의 예리함과 격조 있는 신선함과 유패함인데, 이러한 생명력을 잃었을 때 '죽은 비유'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비유는 상한 음식과 같다. 너무나 오래 사용하고 뻘뻘해서 신선도가 떨어졌거나 오래전에 유효기간이 끝나서 듣는 순간 혐오감을 유발한다. 또는 의도가 너무 앞선 나머지 품위 없이 비틀어지기만 한 빗대기는 추하게 보일 뿐이다.

최근의 죽은 비유는 어느 정치인이 말한 '조선 시대의 후궁' 운운한 경우가 아닌가 싶다.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입장의 차이가 어떠한지, 안일하고 고된 없는 구태의연함이나! 아니면 흑사라도 고도의 치밀함에서 나온 '미친 척하고 옛 목판에 앉어지기'일까? 그 어느 쪽이든 비유를 위장한 막말은 정신의 게으

름과 무례한 오만을 한껏 보여 줄 따름이다.

반면에 좋은 비유는 서로 달리 보이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드러내는 경우다. 이미 익숙한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관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창조적이다. 그래서 좋은 비유의 능력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이며 '천재의 징표'라고 말한다. 사물의 유사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기계적 사고나 습관의 시선 대신 부단한 연마로써 도달하는 정신의 성취다. 이런 창조적 비유를 공공의 영역에서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때 이른 언감생심스의 일인가!

좋은 비유는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처럼 마음속에 들어와 터를 잡는다. 이런 이유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비유의 언어부터 새로워져야 할 일이다. 왜 모르는 것일까? 날카롭지만 우아한 비유의 미학을 모른 채 정치적 계산과 의도만 앞세우는 언사 뒤에 남겨지는 것은 외설스러운, 너무나 외설스러운 모범감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비루할 대로 비루해진 '죽은 비유의 정치'를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독일의 시인 뉘탈린은 우리가 잃어버린 신성의 품격과 이로 인한 언어의 고통을 이렇게 시로 남겼다. "우리는 하나의 징후다. 더는 아무 의미도 더는 고뇌도 아니다. 우리는 거의 잃어버렸다. 낯선 땅에서 언어를." 이 미도 고뇌도 없는 곳에서 시대의 징후로 살아가는 우리가 잃은 것은 서로를 연결하는 언어이며, 그렇기에 낯선 곳의 삶이라는 이 시적 고백이 오래 절절하다.

社說

두 달여 만의 '거리 두기' 완화 지속되려면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 등은 시간제한 없이, 유흥업소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는 그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설 연휴 기간 코로나 상황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 지침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 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오락실·독서실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종교 활동은 좌석수 기준 30%

이내에서 허용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출입 인원이 5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지만, 직계가족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와 시도가 이처럼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두 달여 이상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처럼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민생 현장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다음 달이면 각급 학교가 개학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방역 조치 완화가 자칫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영업 시설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신안 해상풍력발전' 한전 참여 절실하다

최근 48조 원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같은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공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가적으로 개발 비용과 기술력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송변전 설비 등이 필수적인데, 한전은 타빈 일괄 설치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변전 설비 운영 노하우도 풍부하다. 이 때문에 한전이 참여할 경우 조성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정부와 한전 및 민간 간 협업을 통한 공급망 국산화 구축이 가능하며, 개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전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 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은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발전 사업에 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력 계통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이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조건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만 국한하는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한전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개원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얼마만큼 깊은 관심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전남 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기고



임택  
광주 동구청장

전남대병원 백년대계, 상생 협력이 답이다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 보려 한다.

먼저, 오랜 숙원인 병원 신축 문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올해로 개원 111주년을 맞은 전남대병원은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립대 병원이자 지역 거점 병원의 위상을 갖고 백년대계(百年之大計)를 설계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높은 의료의 질, 공공의료 실현에 따른 한계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출발선에서부터 뜨거운 유지 경쟁에 본말이 전도된 양상이다. 전남대병원 신축 이전은 지자체간 유치전에 휩쓸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결정될까 봐 우려 사안이다.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민을 위한 일이 자칫 정략적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관광,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핵심 시대로 키우기 위한 의료특구 지정 등 시너지 효과를 따져 봐야 한다. 개발 가능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주 원도심의 도시 재생은 문화와 관광, 의료 기반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AI 중심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시에 발맞춰 동구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40여 개의 AI 기업을 유치한 것은 물론 지난해 국·시비 35억 원을 확보하고 전남대·조선대 등 대학병원 의료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에 돌입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화산전남대병원을 묶는 의료특구가 지정된다면 점차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쫓지 말고 먼 안목으로 씨를 뿌리자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도심 공동화라는 오랜 공백을 딛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동구를 되바라기는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동구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성공적인 도시 개발·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인구 10만 명 회복과 함께 지난해 지자체 생산성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구 학동애 자리 잡은 전남대병원의 존재감은 가히 절대적이다. 지역 경제를 이끌고 시민 보건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광주의 종갓집' 동구의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관이기 때문이다.

'최상의 환자 맞춤형 통합 진료', '최첨단 헬스케어 융복합 의료 연구' '세계적 의료 리더 양성'이라는 전남대병원의 미래 청사진은 그 어느 곳보다 동구에서러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현 병동 인근의 의과대학 부지 신축으로 재구조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우리 동구는 신축 병동 고층 허가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지자체와 대학병원은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중요한 건, 유지 경쟁이 아니라 상생 협력으로 지역민을 위한 전남대병원의 백년대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은 원심유장(源潔流長)의 교훈을 새길 때다. 원천을 깊고 튼튼하게 해서 유장한 지역의 미래를 열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기고



이재남  
광주양산초등학교 교감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프레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로는 코끼리라 해놓고 뱀을 상상하기를 바라는 언사는 자기도취나 현실감 없는 순진한 상상의 세계일 뿐이다.

말과 언어라는 상징에 내용과 의미가 담겨서 하나의 인지 프레임이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절차의 강력한 에너지로 도덕이나 사회문화적 역사의 배경이 녹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프레임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정치나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이 프레임을 이해하고, 대체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인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되기까지의 집착된 사회 역사적 경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나 논쟁에는 우리 사회 복지 프레임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 부정 수급이나 퍼주기, 예산 낭비 같은 수혜적인 복지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건강한 사회의 일반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중세의 동력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가 경제 효과성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복지 프레임 속에는 보편적 복지가 훨씬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편 복지 속에는 최소한의 인간 기본권과 행복 추구의 보편적 가치가 담겨있고, 선별 복지 속에서는 경제 효율성의 논리만 담겨있다. 이 논쟁은 당연히 국회 표결 결과와 관계없이 보편 복지가 이긴다. 현명한 정치인이라

면 두 개념을 병렬적으로 놓거나, 선택의 문제로 놓을 일이 아니다. 두껍게 보편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적절하게 선별 복지를 보완할 일이다. 일국의 곳간 지기가 보편 복지를 전제하지 않고,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복지 프레임의 과제를 웅변해 준다.

2016년 시작된 1년간의 긴 촛불 항쟁은 20차까지의 국민 쫓겨기를 통해서, 부정한 대통령을 퇴진시킨 무혈 시민혁명이었다. 이 촛불 프레임에는 정의와 도덕에 대한 시민적 자각이라는 에너지의 근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프레임은 사면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체되거나 승화될 수 없다.

통일의 프레임이 분단의 아픔을 품을 수 있을지, 판 사 탄핵이 어떤 성역도 없다는 시대의 가치를 담을 수 있을지, 공정의 프레임이 특권의 구시대적 가치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전쟁은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린 시대가 요청하는 프레임들이다.

프레임 이론이 인식의 명료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미덕이 있음에도 마치, 기술적으로 프레임은 조작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 같다. 오히려 프레임 이론은 한번 잘못 구성된, 사회·문화·역사·도덕적 프레임들이 너무나 강고하기 때문에 책임성을 요구한다는 측면이다. 그 책임성의 절차 지점에는 항상 건강하고, 열려 있는 사회 비판이 소통되어야 하지 않을까.

無等鼓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884년 미국 감리교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으로부터 선교 허가를 받으므로써 비롯됐다. 이듬해 1885년에는 장로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 등이 입국해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차 확산된 기독교는 근대화와 민주화 등에 큰 기여를 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할 만하다. 그만큼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

했다. '사랑의 원자탄'이 불리라는 손영환 목사는 공산당에 두 아들을 잃었

으며 자신 또한 순교했다. 영광 염산 교회도 6·25 당시 김광호 목사를 비롯해 교인 77명이 공산군에 의해 바다에 수장됐다.

그러나 작금에는 비성경적인 논리로 순교를 주장하는 목자들이 적잖다. 코로나 방역 지침인 '대면 예배' 제한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에 맞서는 행태를 순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 모 목사는 정부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며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안디교회 박 모 목사는

지난해 현장 예배 금지를 두고 '교회 말살 정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고 설교를 늘어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앞서 두 교회를 비롯한 선교교회와 국제학교 등이었다.

얼마 전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헌신했던 강신석 목사가 소천했다. 강 목사는 일평생 고난당한 자의 편에 서서 사랑과 공의를 몸소 실천했다. 고인에게 '민주화 운동의 꽃대를 세운 목회자'라는 평가가

따르는 것은 그의 이웃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음을 보여 준다.

예장합동교단이 최근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목회자'(32.8%)가 개혁 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개별 교단·총회·노회 순이었는데, 이는 교회 세습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의 물신주의나 성추문 등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음을 인식한다는 결과다. 진정한 순교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 부단히 실천하는 것이다. 왜곡된 목회 철학으로 교인을 현혹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 /박성진 문화부부장skypark@

우리 시대 목자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